

의료 민영화,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세번째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은 70퍼센트대에 이른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을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벌인 지난 7월 21~22일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가 84퍼센트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하루만 65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을 했다. 일곱 달 만에 2백만 명이 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런 여론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특히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와 공공의료 파괴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중요하다. 서울대병원의 정책은 전체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기준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을 피하려고 여러가지 복잡한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법률에 명시된 최소한의 규제조차 무시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축소 정책도 계속 밀어붙였다.

서울대병원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헬스케어(원격의료, 영리 자회



6월 2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문화제 의료 민영화의 선두에 선 국립대병원에 맞서 노동자들도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다.

사), 첨단외래센터(부대사업 확대, 외부 자본 유치), 아랍에미리트 병원 위탁 운영(병원 해외투자) 등.

이는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놓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조처들은 다른 국립대병원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사립대병원들도 곧 뒤를 따를 것이다.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재벌병원들은 여기서 한걸

음 더 나아가려 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병원비가 크게 오를 것이다. 이는 장차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축소시키고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땀는데, 갈수록 논리가 균색해지자 최근 "공급자(병원) 입장

을 상당히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루 앞두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공공의료를 지키고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가짜 '정상화'에 맞선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노동자 투쟁은 정당하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부문 '정상화'에 맞선 투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서울대병원과 함께 부산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 노동자들도 의료 민영화와 가짜 '정상화'에 맞서 27~28일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부문 정상화는 의료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수익성이 낮다며 공공의료 기능을 축소하려 한다. 공공의료는 그 공익적 성격 때문에 정부 지출이 필수적인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예전대 외상센터나 호흡기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공

공의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도 장차 공공의료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한국의 병상당 인력 비율은 OECD 꼴찌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사실 정부 투자를 줄여 공공의료의

질이 낮아지면 이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이를 핑계로 다시 공공의료를 축소해 온 것이 지난 20여 년 동안 반복된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강릉·속초 의료원에 대한 공격은 그 최근 사례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의료 파괴에 맞선 정당한 투쟁이다.

전면적 의료 민영화 물고 올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제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보건 의료 부문 규제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대학병원이 영리 자회사인 기술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다. 서울대병원과 SK가 불법적으로 추진해 온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다른 대학병원도 헬스커넥트 같은 영리 자회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기술개발에 참여한 의사에게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주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이 더욱 돈벌이에 매달리도록 부추길 것이다.

의료 편의와 연구를 명분으로 기업들에 환자의 질병정보를 보여 줄 수 있는 길도 터주고 있다. 이미 헬스커넥트가 SK측에 환자 질병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임상시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자들을 실험용 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상시험 1위인 서울대병원은 그야말로 "임상시험 천국"



7월 22일 의료연대본부 2차 파업. 돈벌이 의료를 막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 투쟁은 정의로운 투쟁이다.

이 될 것이다. 이런 시험으로 얻는 특허는 병원이 폭리를 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병원 내에 메디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처도 포함됐다. 메디텔에 환

자를 입원시킬 수도 있다. 이는 다인실을 줄이고 1인실을 대폭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환자들의 입원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한 회사가 여러 병원에 메디텔을 설치하면 체인형 병원처럼 운영할 수

도 있다. 삼성처럼 소유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재벌병원이 여러 병원의 실질적 소유주가 될 수도 있다.

메디텔 안에 의원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메디텔은 사실상 영리병원처럼 운영될 수도 있다. 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객실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도 허가하려 한다. 중국계 산얼병원은 얼마전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했지만 최소한의 응급의료체계도 갖추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9월 안에 설립을 승인하려 한다. 최근 보도를 보면 산얼병원의 모회사인 CSC헬스케어의 회장은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산얼병원의 최대주주사 두 곳은 지난해 1년 전에 부도가 난 상태다.

정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사업과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칭송'하며 의료 민영화 정책의 선구적 모델로 삼으려고 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병원 위탁 운영 부족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리트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서울대병원은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5년 동안 운영 예산 1조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칼리파 병원에서 고용할 1천4백20명 중 15~20퍼센트인 2백여 명을 서울대병원과 국내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이미 1차로 1백43명이 선발됐지만 서울대병원은 노동자들의 고용조건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노사협의회 때 인력 선

발로 생기는 빈자리를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바꿨다. '가급적 필요하면 충원하겠다'며 2백 명 전원 채용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도 안 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비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병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부족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충원하라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위해서도 정당하다.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청소 노동자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생활 임금, 식권·근무복 세탁비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청소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저임금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하청업체를 바꾸면서 인원을 축소해 도급비를 지급했다. 그러자 하청업체들은 줄어든 도급비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청소 노동자들의 유급 휴일을 축소하고 설·추석 상여금조차 폐지했다. 하청 업체들은 지금도 '임금인상의 여력이 없다', '줄 수 있는 것을 다 줬다' 하며 임금인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까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식권, 근무복 세탁비도

하청업체에 떠넘겼고, 하청업체는 그 비용까지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청소 노동자들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린다. "병원이 교육할 때는 청소도 의사만큼 중요한 일이라며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대우는 그렇게 안 해 준다", "하청업체는 돈도 없다면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이면서 정부 지원인 시중노임단가도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로 연봉 2억 원을 받는 의사가 1백 명이 넘는 서울대병원이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월급 1백30만 원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나선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연대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시시오.